

“군 공항 이전 후보지 무안에 1조원+α 지원”

국방부, 무안서 첫 주민설명회...이전 절차 속도 광주시·전남도 책임·의무, 특별시 승계 명문화 예비이전후보지 곧 발표...주민투표 거쳐 확정

광주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무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행 절차에 들어갔다. 국방부가 무안군민을 상대로 이전 지원방안을 공식 설명하면서,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 이전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1일 오후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한 첫 공식 설명회로, 현장에는 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 국방부는 △이전사업의 세부 절차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등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 6자 협의체 합의한 이전 후보지 지원안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전 부지에는 1조원+

α 규모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재원은 기부 대 양여 차액과 광주시 자체 조달, 정부정책 지원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기부 대 양여 차액은 총 6400억원 규모다. 기존 차액 2900억원에 특별법 개정을 통한 부담금 면제분 3500억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이전 후보지가 확정되면 광주시는 이전 사업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이 희망하는 사업을 즉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자체 조달 방식의 지원도 추진된다. 광주시는 2027년부터 2034년까지 8년간 매년 150억~200억원을 적립해 총 1500억원 규모의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재원 역시 무안군이 원하는 사업에 투입되며, 사업 완료 뒤 광주시가 무안군에 무상양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정책 지원사업은 4696억원 규모로 제시됐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농업 AX 플랫폼 구축 2900억원,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450억원, 무안천 국가하천 정비 412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6자 협의체 합의사항과 전남도·광주시의 책임과 의무는 특별법에 명문화돼 통합특별시에서 그대로 승계되는 사실도 밝혔다.

김경수 광주시 군공항건설단장은 “이번



1일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주민 설명회에서 질의응답이 이뤄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설명회는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전사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으로 시작일 뿐이다”면서 “앞으로 남은 모든 과정에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일방적 추진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이전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내달 13일 개막

국내의 인권활동가 1000명 ‘권위주의·포퓰리즘 대항’ 논의 UN 인권최고대표 최초 참석 기조연설...인권도시 위상 증명

국내의 인권 활동가들이 광주서 오월 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포럼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처음으로 직접 참여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네스코(UNESCO),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이 공동 주최하며 국내외 인권도시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

할 전망이다.

올해 포럼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전 세계로 확산하는 권위주의 경향과 포퓰리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인권도시 광주의 민주·인권 가치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도시 차원의 인권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인권도시 간 연대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개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킹회의, 인권투어 등 6개 분야 1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전체회의에서는 국내외 도시 대표와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발생하는 인권 과제를 진단하고 인권도시의 역할과 실천 방향을 모색한다.

주제회의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여성, 인권마을, 장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현안을 다룬다.

특별회의에서는 포럼 주제와 별도로 대학과 연계해 인공지능(AI) 시대 인권의제를 논의한다.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참여해 인공지능(AI) 시대의 민주주의와 웰에이징을 주요 의제로 미래 인권 과제와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전국 광역자치체 인권위원회회의, 인권활동가 네트워크회의 등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국·내외 포럼 참가

자들과 함께 5·18 행사 및 사적지 등 인권현장을 방문하는 인권투어도 운영할 예정이다.

포럼 개회식이 열리는 14일에는 유엔의 인권 분야 최고 책임자인 볼크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확산 속 인권도시의 역할과 국제 연대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오스트리아 출신 인권법 전문가인 튀르크 대표는 2022년 10월부터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튀르크 대표는 난민 보호와 국제 인권정책 분야에서 30여 년 활동한 세계적 인권 전문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용수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라며 “광주가 세계 인권도시 협력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도, 재택의료센터 36곳 운영...의료체계 강화

22개 시군 확대...장기요양등급자 등 대상 맞춤 지원

전남도가 재택의료센터를 22개 시군 36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지역사회 기반 방문 의료체계 강화에 나섰다. 병원 이용이 쉽지 않은 어르신과 돌봄 필요 주민이 가정에서 진료와 간호, 복약관리, 돌봄 연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팀이 환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복약관리, 건강상담,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합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전남지역 재택의료센터는 보건소가 직접 맡는 전담형 6곳,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협업형 6곳, 의료기관이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자와 인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

망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상태 평가를 거쳐 방문진료와 간호, 돌봄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센터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는 재택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의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광장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료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방문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공적 복지는 한계...민간 후원·봉사가 중요

▶1면에서 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선다. 도시락 전달, 학습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일상에 밀착된 활동이 개인의 삶을 지탱하고, 이는 다시 지역 공동체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현장에서는 공적 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 북구 운암3동 박지영 주무관은 “행정 지원만으로 모든 현장을 실시간으로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김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라도 법적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지원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어 필수적이며, 봉사단체와 후원자의 존재 자체가 촘촘한 복지망 유지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복지단체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를 나눌 손길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더 많은 시민 참여가 이뤄질 때 지역 공동체도 한층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봉사와 후원이 단순한 물질 지원을 넘어 ‘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단절됐던 개인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변화가 대부분 이러한 나눔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에게는 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정서적 연결이 큰 힘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독거노인 돌봄과 식사 지원이, 아동·청소년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교육 중심 지원이 활발하다.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 증가 지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역 복지에서 민간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선자 전사무료급식소 자부장은 “작은 도움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눔이 확산될수록 광주는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부제’ 강화...공영주차장은 5부제

원유 위기경보 ‘경계’ 격상...8일부터 삼진아웃제도 도입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가 오는 8일부터 2회(2부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원유에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기후에너지안전경보는 자원안보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지난달 25일 강화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8일부터 2부제로 제차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2부제는 흡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않아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과 임산부 탑승 차량,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직원의 차량,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계속 부제를 피할 수 있다.

2부제로 차 운행 제한이 강화되면서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부제를 1회 위반 시 구두경고·제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기후부는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인원 분산, 필요불급한 출장 자제와 화상회의 활성화도 요청했다.

민간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참여’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5부제 방식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유아(미취학)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공공기관장이 공영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는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와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 5부제도 적용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도, 소규모 공사비 설계 기준 구조 개선

공사금액 4억3000만원까지 확대·33개 공종 적용

현장여건 반영 설계로 품질·안전 동시 개선 기대

전남도가 소규모 건설공사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자가 설계 관행을 손보기 위해 설계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공사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낮추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공사금액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4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됐고, 공종도 20개에서 33개로 늘었다.

그동안 소규모 건설 현장은 설계기준이 부족하거나 현장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비 운영이 제한되거나 시공량이 표준품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반영하는 공종 6

개가 새로 포함됐고, 표준품셈이 없는 공종에 대한 산출 기준을 마련한 5개 공종도 추가됐다.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공종 2개 역시 반영됐다.

현장 조건을 고려한 설계가 가능해지면 시공사비 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적정 공사금액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성진 대한전선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현장 상황을 반영한 공사비 기준이 마련되면서 지역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공사에서도 적정 대가가 보장돼 안정적인 시공이 가능하리라”며 “이번 기준 개정이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안전·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